

〈예식장 부족과 값값이 스프레드는 국가의 역할 바깥에 존재하는가?〉

-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함의 -

2025년 4월 23일 (수)



예식장 부족과 값값이 스프레드는 국가의 역할 바깥에 존재하는가?

-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함의 -

여의도연구원 옥승철, 김장우

1. 문제 현황

□ "결혼식,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예식장 부족 사태 심화

- 코로나로 인한 결혼 감소로 다수의 예식장이 폐업하여 현재 예식장 대기만 1년 반 소요¹⁾
- 코로나 사태를 전후해 2019년 890곳에서 2024년 714곳으로 19.8% 감소한 반면, 인구 규모가 더 큰 90년대 초중반생이 결혼적령기에 진입하고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 수요까지 더해지며 결혼 건수 증가 추세
 - 혼인 건수는 24년 기준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예식장 예약이 어려워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성토 다수

□ 값값이 스프레드를 비롯한 예비부부 올리는 높은 결혼 비용

-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1위 '결혼 자금 부족'(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 2025년 기준 평균 대관비는 1,401만 원으로 2021년 896만 원에서 56.4% 급증³⁾, 여기에 더해 스프레드(평균 440만 원)⁴⁾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추가금 폭탄으로 예비부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2. 예식장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실태

□ 공간의 정책 대응

-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39곳의 공공시설이 예식 공간으로 개방되었으나 일부 공공예식장은 연간 예식 건수가 0~1건에 불과하고 전체의 약 53%가 실적 전무⁵⁾
- 서울 소수 인기 공공예식장은 예약 경쟁 치열하고 대관료 제외한 부대비용도 민간과 큰 차이 없어 양극화 현상 발생⁶⁾

1) '사랑보다 힘든 결혼식...'예식장 대기만 1년 반", 《조선일보》, 2025.4.15.

2)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약자로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통칭함

3) '사랑보다 힘든 결혼식...'예식장 대기만 1년 반", 《조선일보》, 2025.4.15.

4) '스프레드 추가금만 수백만원... 결혼 첫날부터 "호구"', 《조선일보》, 2025.4.16.

5) '공공예식장 절반이 "실적 제로"인데, 되레 숫자 늘린 정부', 《더스쿠프》, 2024.11.6.

6) '공공 예식장에 문의했더니... "내년 9월에 한 자리 남았어요"', 《조선일보》, 2025.4.15.

□ 국내 지자체 공공예식장 운영 현황

- 현재 국내에는 몇 개의 지자체가 공공예식장 정책을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 운영방식과 성과에 차이가 존재
 - 서울시는 예산 투입과 양질의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예식장 이용 증가 중
- 다만, 다른 지자체의 공공예식장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시설 미비, 운영방식의 비전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서울시 '서울마이웨딩'(공공예식장) 사업

- (운영목적) 예식장 부족으로 인한 결혼식 예약난 해소, 저비용의 건강한 결혼식 문화 조성
- (운영기간) 2024년 2월부터 상시 모집 중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예비부부의 부모 중 한 명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포함
- (예식장소 및 운영방식)
 - 서울시 내 총 26곳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북서울 꿈의숲, 선유도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 하객 100~200명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대관료 전액 감면
 - 스톤메 표준계약서 이행 의무화를 통한 서비스 내용 및 가격정보 공개 준수
 - 스톤메 표준가격 준수 때 최대 100만 원 지급
 - 피로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락 메뉴 단가 하향 조정
 - 서울시 결혼 협력 업체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
- (평가)
 - 공공예식장에 대한 예비부부의 만족도가 97%로 매우 높은 편(서울시 자체 조사)
 -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6곳 중에 소수(변동 꿈의숲, 양화동 선유도공원 등)의 공공예식장에 예약이 몰리는 등 장소 양극화 심화

3. 공공예식장 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 해외 공공예식장 정책 현황

- 행정기관이 예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예식장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제도로, 국가가 결혼을 공공복지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국가 공공 서비스로서 제공
- 그 일환으로, 시청이나 구청을 중심으로 한 무료 또는 저비용의 공공예식장 정책이 정착된 사례가 다수 존재
 - ※ 공공예식장 제도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민법을 계기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고, 결혼이 국가가 주관하는 법적 행위로 제도화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
- 해외의 공공예식장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결혼 당사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간소화한 예식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저출산·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공공예식장 지원을 국가의 역할 안에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① 프랑스⁷⁾

- (개요) 프랑스는 법적 혼인이 시·구청에서 진행되는 민사결혼(Mariage civil)을 통해 이루어짐. 이는 프랑스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 (운영방식) 시·구청에서 주례권을 가진 시·부시장, 구청장 등이 직접 주례를 진행. 결혼 당사자와 증인 2명이 필수로 참석, 혼인 선서 및 서명 절차를 포함 약 15~20분 소요
- (예식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 전용 결혼식장 활용, 일부 대도시 시청은 전통적인 장식과 역사적이고 품격있는 분위기를 갖춘 공공예식장을 제공
- (신청대상) 프랑스 시민 또는 프랑스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 (운영기간) 예약제로 상시 운영되며, 신청 후 약 1~3개월 내 결혼 가능
- (지원내용) 예식장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처리 비용 등 전액 무상. 단 선택적으로 장식이나 사진 촬영, 식사비 등은 민간 업체 활용
- (특징) 시민이 시·구청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국가가 결혼을 사회적 제도로 직접 주관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7) 'Mariage en France', <Republique Rancaise>, 2025.4.17.

② 독일⁸⁾

- (개요) 법적 혼인은 반드시 시청 또는 구청 내 혼인등록소(Standesamt)에서의 혼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 발생
- (운영방식) 혼인 의식은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사무적인 절차와 짧은 선서, 서명 등의 형식으로 구성
- (예식장소) 시청 내 공공예식장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미술관, 정원, 역사적 장소 등도 혼례 장소로 허용. 장소 선택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음
- (신청대상) 독일 시민 또는 독일 내 합법 체류 중인 커플
- (운영기간) 연중 상시 예약 가능
- (지원내용) 기본 행정수수료(한화 약 16만 원)만 부담하면 예식이 가능하며 장소 임대 및 주례 서비스는 공공이 제공. 사진, 장식, 식사 등은 민간 이용
- (특징) 공공기관이 결혼식을 주관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시민에게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 공공장소의 활용이 매우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구성

③ 싱가포르⁹⁾

- (개요) 싱가포르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반드시 정부 산하 혼인등록소(Registry of Marriages)에서 혼인 서약을 해야 하며, 법적 혼인은 이 절차를 통해 성립됨
- (운영방식) 공무원이 진행하는 짧은 혼인서약식이 혼인 성립의 핵심. 정해진 시간에 혼인문서를 낭독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예식장소) 공공청사 내 공공예식장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타 공공시설, 일부 사전 승인된 민간장소에서도 진행 가능. 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결혼식 예약 가능
- (운영기간) 필요에 따라 상시 예약 가능
- (지원내용) 혼인 등록 및 예식 절차는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예식용 기본 공간 무료 제공
- (특징) 공공혼례 절차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 매우 편리한 결혼 예약 플랫폼 구축

[표1] 해외사례 공공예식장 제도의 주요 요소

구분	해외 시사점	한국 적용 방안
장소 다양화	공공자산 결혼식장화	시청, 공원, 미술관 등 지역 유휴공간 전환 지원
실용 결혼	저비용 소규모 중심	무료, 소규모 중심의 결혼 문화 확산 지원
이용 접근성	통합 예약 시스템	전국 통합 공공예식장 플랫폼 구축
인지도 확산	문화 캠페인 및 콘텐츠 활용	유튜브, 공공 홍보 콘텐츠, 사례 공모 등 홍보 강화

8) 'Jasmin Reddmann Diese Trauungen sind in Deutschland möglich', 《Bild》, 2025.3.21.

9) 'Marriage programmes', 《Registry of Marriage in Singapore》, 2025.4.17.

4. 정책 대안

□ 정책 비전과 목표

- (비전)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고 부담 없는 결혼식"
- (목표) 예비부부가 과도한 부담 없이 품격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 예식장을 복지의 일환으로 지원

□ 세부 정책 방안

- (공공예식장 전용 공간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지자체가 예식장 인테리어 및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매칭 지원(서울 제외)
 - 시설 개보수비, 인테리어비, 장비 구입비 등 일회성 설치비 우선 지원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정부 지원금의 매칭 비율 설정
 - 공공예식장 이용률, 시민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연차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지자체에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전국 단위 예약 플랫폼 구축) 전국의 지자체와 연결된 통합 예식장 신청 온라인 플랫폼을 중앙 차원에서 구축하고 운영
 - 예약 플랫폼 내에 예식장 신청뿐만 아니라 결혼식 협력 업체 또한 선택 가능
- (공공예식장 관련 정책 표준화) 전국에 분산되어 각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공공 예식장 관련 정책을 표준화하고 지자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공공+민간 결합형 운영모델) 공공예식장은 지자체가 장소와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결혼 관련 준비 서비스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는 '공공+민간 결합형' 운영모델 제시
 - (스드메 업체 표준약관 이행) 지자체의 공공예식장 운영 가이드라인에 스토메 표준계약서 및 약관¹⁰⁾을 포함시켜 관리 감독 강화 지원¹¹⁾
 - (질적 수준 제고) 공공예식장 운영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지자체별 시설들을 서울 인기 공공예식장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도모
- (공공자산 결혼식장화 지원) 국가 보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 발굴 및 공간 전환 사업 지원
 - 국가 소유의 유휴공간을 전수조사하여 공공예식장에 부합하는 대상지 발굴
 - 예시) 공원, 공공기관 강당, 시도구청, 미술관, 박물관, 문화회관 등

10) '스드메 '폼수 추가금'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동아일보》, 2025.4.3.

11) '강제 아닌 권고 수준 가격 공개 정책에... "깜깜이 스토메" 여전', 《조선일보》, 2025.4.16.

○ (적극적 정책 홍보)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 감소 중

- 레저시 미디어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중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 청년들에게도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이만큼 멋지게 결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결혼 동기를 부여

5. 기대 효과

□ 혼인을 제고 및 결혼 진입 장벽 완화

- 공공예식장 공급 확대를 통해 20~30대 저소득 중산층 예비부부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품격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혼인을 및 출산을 회복에 기여

□ 건전한 스프메 시장 질서 확립

- 관련 업체들의 표준약관 이행과 가격 공개를 통해 건전한 스프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6. 결론 및 시사점

□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결혼 준비 지원의 공공 역할 확대 필요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는 행정기관이 예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예식장 제도를 운영하며, 복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
- 공공예식장 정책은 단순히 예식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결혼 지원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저출산 저성장 대응을 위해 결혼 지원을 복지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공예식장은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공공예식장 공급 확대를 통한 결혼 접근권 보장

- 전국적으로 예식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수 예식장의 폐업으로 예약 대기 기간이 최대 1년 반에 달하는 상황
- 혼인 전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의 수가 감소하여 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질의 공공예식장 공급 확대를 통해 결혼 접근권 보장

□ 결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

- 예비부부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결혼 비용이며, 특히 스프메 비용은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공공예식장은 저렴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표준약관의 마련 및 이행 관리가 필요함

□ 공공예식장 정책의 전국 표준화 및 질적 수준 향상

- 지자체마다 상이한 공공예식장 운영방식 및 품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과 표준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의 인기 공공예식장 수준으로 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